

# 청년 체감 실업률 23%... 일자리 눈높이 낮춰라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

**(3부) ②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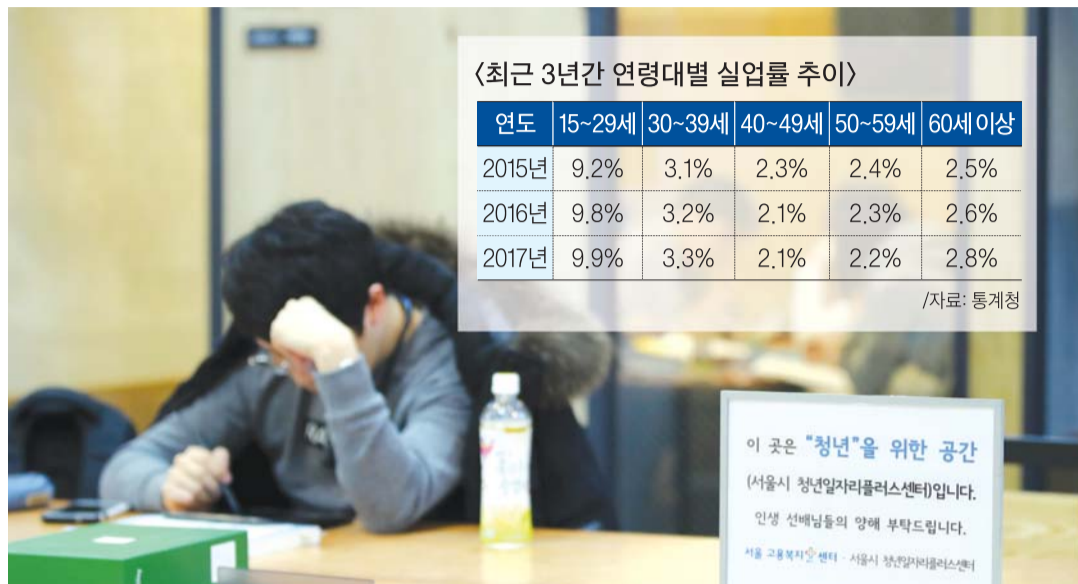
청년 실업률 9.9%... 전년 비 0.1% 올라  
취직 준비 단념하는 '니트족'도 늘어나  
"정책 얘기보단 원인분석" 끝장토론 개치

#. 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27)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에서 줄줄이 낙방했다. 주변의 권유로 눈을 낮춰 중소·중견 기업에도 지원했지만 막상 붙은 곳은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입사 지원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노렸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서류를 넣어봤는데 막상 붙은 곳은 마음을 붙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족을 못하는 개인의 문제 만으로 치부하기엔 사회 구조적 한계가 느껴진다"며 "좋은 대학 나오면 걱정 없다"던 그간 한국 사회의 교육 방침을 믿고 따른 우리는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올 겨울 청년들이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지표로 제시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시장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다. 이에 구직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놓고 있는' 청년만 지난해 30만명을 돌파했다.

한창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재앙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군에 쏠리며 취업 준비에 몇 년씩 소비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에서 "앞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방침에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머리를 맞대고 청년 실업률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몇 차례의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연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5년	9.2%	3.1%	2.3%	2.4%	2.5%
2016년	9.8%	3.2%	2.1%	2.3%	2.6%
2017년	9.9%	3.3%	2.1%	2.2%	2.8%

(자료: 통계청)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작년 실업자 103만 명·청년실업률 9.9%...역대 최악의 취업난. 특히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7%라고 한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스티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실업률 9.9%**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9%까지 치솟았다. 전년 9.8% 대비 0.1%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2000년 통계 측정 방식을 정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더 나빠졌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22.7%까지 뛰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층 실업률이 오르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해 무려 102만8000명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 101만 2000명 대비 1만6000명이 더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타 연령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30대 실업자는 19만명, 40대 14만4000명, 50대 13만8000명, 60세 이상 12만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등에서 채용을 늘렸는데 이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영향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취업준비생은 통상 실업자에 포함된다.

문제는 실업자도 분류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려워

지면서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 4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은 30만1000명(3.2%)으로 같은 기간 2만8000명(0.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통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데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장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유도 있지만 그냥 '쉬었다'는 것은 이와 꽤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이들을 두고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구직활동을 해도 안 되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책 또는 예산 조치만으로 풀 수 없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나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대졸자 수와 인구구조 등에 비춰볼 때 오는 2025년까지 청년실업이나 청년층 취업 포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미스 매치·창출 부진 영향**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 미스 매치'와 '일자리 창출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마디로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또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3000명에 그치는 등 같은 기간 1.8% 줄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지표에서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평균 역량은 중·상위권이지만 상위 1%의 역량은 최하위국에 속했다. 반면 하위 1%의 역량은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격차가 매우 작고 중간에 밀집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량이 비슷한 청년들이 취업에서 사무직이나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짙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던 실정이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 같은 중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서비스 및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는 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동질적인데 이들이 찾는 사무직, 생산직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줄고 있다"며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적되는데 정확하게는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했다. 당장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각 부처 실·국장급이 모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따지며 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 얘기보단 원인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현재 있는 정책들이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대책**

<b>불법사금융 단속 강화</b>	<b>정책서민금융 확충</b>
법부처 일제 단속 대응 체계 개선 처벌 및 배상책임 강화	상환능력 있는 경우: 특례 보증지원 상환능력 없는 경우: 적극적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b>복지 지원 확대</b>	
금융·복지간 정보사각지대 해소	
탄력적 복지제도 운영	복지 지원 수준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영업 막는다

>> 2면 '안정망 대출 1조 공급' 서 계속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법금·보상금 ↑**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선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 간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소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을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도 운영한다.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200만~1000만원)도 부여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도 구축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시 벌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 올린다.

최 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현대차·대한항공 '노사갈등 한파' 지났다

**임금단체협상 마무리 양상**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노사와 대한항공 노사간 갈등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긴 현대차 노사와 3년 여간 갈등을 이어온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7부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앞두고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 노조원 전체를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역시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 울산공장 야반폐업에서 열린 4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



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 고용 등 지난달 19일 마련했던 1차 잠정 합의안 골격을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 인식 하에 이번 2차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도 3년 만에 임단협의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특히 임금협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현장경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 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조종사노조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대영 일반 노조 신입위원장과 의상권 이후 두 번

째다. 이같은 조 사장의 노력으로 대한항공과 노조는 2015년 10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3년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임금 총액은 1.9% 인상, 2016년 임금총액은 3.2% 및 보안수당 500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공항에서 대기만 하고, 실제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조종사에게 국내선 체류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대한항공은 2017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